# 인도 침범 음식물 쓰레기통… "악취에 안전 위협도"

**높은 기온에 음식물 쓰레기 부패**
**악취·비위생, 보행자 '불쾌지수 ↑'**
**소규모 음식점 제재할 조례 미비**

광주 동구 소재 번화가 인도 위에 음식점에서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놓여있다.

"안 그래도 습한 날씨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은데 가득 찬 음식물 쓰레기통과 그 냄새로 기분이 더 상해요."

광주 시내 일부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인도와 길가에 방치해두고 있어 시민들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무방비하게 놓여진 탓에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악취와 안전 문제 등이 야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8일 광주 동구 소재 번화가 식당 앞. 인도 한쪽에는 음식점에서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매주 월·목요일 일몰 후 자정까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지만, 수거용기는 배출일이 아닌 날에도 같은 자리에 방치된 상태다.

오락가락한 비로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한 날씨 탓에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는 역한 냄새가 풍기는 상황이다.

도로를 점령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는 거리 미관도 훼손은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에도 방해를 주고 있다. 이 곳을 지나는 행인들은 인도 양쪽으로 놓여진 쓰레기통으로 인해 좁아진 인도에서 내려와 차도로 통행하기도 했다.

인근 주민 이연성(28)씨는 "식당이 줄지어 있는 번화가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하나씩만 내놓더라도 음식물 쓰레기통만 수십 개다"며 "좁은 인도에 쓰레기통까지 있으니 보행하는데도 불편함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안 그래도 불쾌지수가 높은 날인데 코를 찌르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에 구역질까지 올라올 정도다"고 덧붙였다.

특히 음식물이 부패하기 쉬운 여름철에는 각종 해충까지 들끓으면서 감염병 우려까지 낳고 있어 행정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광주 각 지자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음식점과 상가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장소는 구청장 권한으로, 대부분 '사업장 앞'으로 계도하고 있다.

수거일은 대부분 구역별 격일이며, 수거일 전날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만 배출할 수 있다. 현행법상 사업장 면적 200㎡ 이상의 다량 배출 사업장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배출 규정을 주로 어기는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계도만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영업에 지장을 우려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동구의 한 자영업자는 "여름철 유독 음식물 부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식당 내에 둘 경우 하루 이틀 내에 가게 안에 냄새가 진동한다"며 "가게 위생상 밖에다 두면서도 거리 미관상이나 행인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배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이와 관련해 여름철마다 잦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제재할 방법은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수거 전날 음식물 쓰레기통을 내놓아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계도에 나선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인한 불편함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현행 조례로 단속을 하기에 한계가 있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조례를 지키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민원 접수 시 적절한 조치를 바로 취하겠다. 또 현실에 알맞은 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 남구,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대거 늘린다

**예산 4000만원 추가 투입**
**기존 6곳→20곳으로 확대**

광주 남구는 오는 8월부터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어린이집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4000여만원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현재의 3배가량인 20곳으로 늘어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양육 부담 경감과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월 60시간 이내 범위에서 단시간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어린이집에서는 시간제 보육 이용 아동의 정원으로만 구성한 독립반과 기존 어린이집 정규반에서 정원 40% 이내로 구성한 통합반 2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독립반의 경우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이며, 통합반은 6개월 이상에서 만2세 아이다.

시간당 보육료는 5000원이며, 이 가운데 3000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2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현재 관내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 중인 어린이집 6곳으로, 독립반 6개 및 통합반 1개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남구 관계자는 "갑작스레 일이 생겨 아이를 잠깐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모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면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 오월단체, 5·18 왜곡 발언한 전 위덕대 교수에 승소

**수업서 '항쟁 북한군 개입' 언급**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강단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을 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최윤중 판사는 9일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부상자회가 박훈탁 전 위덕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장은 박 전 교수가 5·18재단 등 3개 단체에 각기 위자료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박 전 교수는 2021년 3월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비대면강의에서 "5·18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5·18단체는 "박 전 교수의 주장은 5월단체와 항쟁 참가자 등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5·18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했다"며 같은 해 10월 각 단체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18단체는 "박 전 교수가 이미 허위 사실로 밝혀진 북한군 개입설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거 있는 주장이라며 역사적 사실로 단정한 발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 박 전 교수의 주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 5·18단체에 무형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에 나섰다.

재판장은 박 전 교수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 청구 취지의 10%에 해당하는 배상액만 인정했다.

재판장은 "박 전 교수가 '북한군 개입설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로 판단한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5·18 단체 등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5·18 북한군 투입설은 여러 차례 펼쳐진 공식 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법원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일관되게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달 활동을 마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북한군 개입설을 사실무근이라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김은지 기자

## 강압수사에 '북한 간첩' 인정 일가족, 50년 만 재심서 무죄

**광주고법, 불법 수사 인정 '무죄'**
**피해자 "50년 세월…허탈하다"**

1970년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연행·고문 등 고초를 겪은 뒤 남파 간첩으로부터 입북 회유를 인정, 유죄를 선고받았던 '거문도 간첩 사건' 일가족이 50년 만의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기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70)씨, B(78)씨 등 4명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B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세상을 떠난 A씨 부모도 50년 만에 한을 풀었다.

이들은 1973년께 남파 간첩과 접촉해 북에 다녀오거나 여수시 거문도 일대에서 각종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남파 간첩은 월북 인사의 일가 친척이기도 한 이들에게 접근해 온갖 입북 회유 공작을 벌였다. 수사 기관은 A씨 일가족과 8촌 친척인 B씨까지 덩달아 불법 연행한 뒤 가혹행위로 "북한공작원이 맞다"는 취지의 거짓 자백을 이끌어 냈다.

간첩 누명을 씌워 기소된 이들은 강압 수사에 못 이겨 법정 진술에서도 간첩 혐의를 시인했고, 법원도 1974년 유죄를 인정해 형을 확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들을 불법 연행하고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불법 구금으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도 인정된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역시 위법해 증거 능력이 없다. 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한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 역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판시했다.

A씨 등은 재판 직후 "기껏 '무죄'라는 두 단어를 들으려고 50년 세월 동안 그렇게 애가 닳았나 싶다. '철커덩'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무죄 선고가 나니 허탈하고 허망하기만 하다"며 회한을 털어놨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은 무죄 판결을 근거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지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 앞서 1977년 거문도 일대에서 입북 모의, 대남 공작 지원 등을 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일가족 5명도 지난해 11월 열린 재심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김은지 기자

## 오늘 새벽부터 강한 비… 광주·전남 전역 호우 예비특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면서 광주·전남 전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지는 등 수해 예방이 당부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10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광주와 전남에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30~80㎜에서 많은 곳은 최대 150㎜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다.

특히 10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광주·전남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 강한 비가 예보됐다. 같은 시각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 전역에 호우 예비특보도 발효된 상태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내리면서 강수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잠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기온이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4도, 낮 최고기온은 26~29도로 예측됐다.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된다"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에 대비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찬 기자